

■ 與 '세종시법 개정' 구상 내용과 파장

행정복합도시서 자족도시로 축소 추진

법개정으로 대대적 변경…野·충청권 강력 반발

여권내에서도 반대 목소리…향후 정국 급랭 조짐

여권이 14일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규모와 성격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장관 고시를 통한 규모 축소 대신 법 개정을 통해 대대적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여권 및 충청권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세종시 관련 핵심 법은 지난 2005년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12부4처2청(현 정부조직법상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법개정 선택은 큰 폭의 변경 예고=여권은 결국 장관 고시를 통한 이전 부처의 축소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기본적인 성격을 아래 바꾸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최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규모 조정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나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만 된다"고 말한 것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장관 고시를 통한 세종시 축소는

이전 또는 미이전 기관의 선택 등 생활을 다양하게 생산하며 정치권 논쟁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은 단 한 번의 격차 충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 응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충청권 출신 국무총리 임명 후 종리가 지속적으로 세종시 축소와 변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만을 세종시로 내려보내고, 여기에 서울대·공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부문 등을 이전함으로써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녹색 성장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야당 반발 속 법 개정 가능할까=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5당은 이

미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공조카로 합의해 놓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 응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충청권 출신 국무총리 임명 후 종리가 지속적으로 세종시 축소와 변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제는 진박(진 박근혜)계의 태도. 진박계 내에서는 현재 찬반이 혼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에 따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던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 진박 진영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광주 방문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엄연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국민간 신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에 앞서 박 전 대표라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원 장안 선거 지원에 나선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親盧진영, 경남 양산 재선거에 '집결'

문재인·유시민 등 참석
기자회견 갖고 지지 호소

10·28 경남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를 계기로 친노 진영이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친노 신당 등 친노 세력의 정치권 재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송언배 후보 선대위원회는 양산시 덕계동의 선거사무소에서 '노무현 진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송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안희정 민

박원순 등 진보세력 내년 지방선거 참여

19일 '희망과 대안' 결성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의 진보인사가 정치적 모임을 결성,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인사 100여명은 오는 19일 오후 조계사에서 친립총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활동 등을 목표로 하는 '희망과 대안' 모임을 결성한다.

이 모임에는 박 상임이사, 백낙청 명예교수를 비롯, 백승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함세웅 신부, 수경 스님,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 사우총장 등 진보단체 인사가 총망라돼 있다.

이들은 모임을 결성한 뒤 각 진보세력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진하는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인물을 지원하는 '좋은 후보 만들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사회진영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주의 회복과 대안 정치세력 형성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게 이 모임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희망과 대안' 민주당 등 진보세력의 연대를 추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신문 구독료·NIE 등 소외계층 지원 대폭 줄어"

조영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름철에 신문 구독료·NIE 등 소외계층 지원 대폭 줄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14일 "소외계층 매체 운영 및 구독료·NIE 지원 등 신문발전 위원회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2007년 24억5천만원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1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사연수 및 청소년 대상 신문 활용 교육 등 NIE 지원 사업도 13억 원에서 지난해 이후 1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교사연수 및 청소년 대상 신문 활용 교육 등 NIE 지원 사업도 13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됐다.

광주 中企정책자금 지원 7개 대도시 중 꼴찌

김재균 의원



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고용률, 경제활동 참여율이 16개 시 도 중 15위에 그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여!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단과합격특강

SHADOW 교육원, 원우증기원, 기초학원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한빛고시 학원시스템

한빛고시 학원에서 수강생 분들이 있습니다.

개강 11·2

전화 034-0234

미래재학봉 좌장인을 올야간반

= 10월 1일 이간반 개설 =

첫개강 11·2

강의시간 19:00 ~ 22:00

기초부터 실학이론

기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